www.moef.go.kr



2018

예산낭비신고 사/례/집

2019. 12.

기획재정부

www.moef.go.kr



예산낭비신고 사례집

| 2018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19. 12.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
사례집
2018년
2019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ontents

2018 예산낭비신고 사례

01 정부지원금, 각종 연구개발비 횡령 및 부당사용
02 고하도해상 부실공사
03 인도 부실공사에 의한 공사비 낭비
04 주거급여 미자격자 부정수급
05 남부순환로 실개천 예산낭비
06 도로 재포장공사로 예산낭비
07 장애인 재활병원 의료장비 미사용 방치
08 보훈 위탁병원 진료비
09 정부사업비 예산남용 신고
10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투자심사 관련
11 인도구간 정비공사 후 재공사 발생
12 경로당 마구잡이 신축 등 예산낭비
13 ㅇㅇ시 예산낭비 사례 신고
14 국고 손실에 관하여
15 자원봉사 활동비 부정지급에 대한 실태조사
16 가평 자라섬 페스티벌 보조금 유용 신고
17 공무원 서울 통근버스 예산낭비
18 예산 40억 수의계약 친인척 개입 의혹 논란 등



01 정부지원금, 각종 연구개발비 횡령 및 부당사용

신고내용

- 각종 개발비와 연구비, 방산 지원금 등을 모 제조업체의 양산품(IRO, RRU, PRU, AMHS, IMHS 등) 자재를 구매하는 곳에 사용
- 이 과정에서 구매이력 자료를 날조,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비를 중앙부처에 허위 신고하고, 구매 업체와 입을 맞춰 허위 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음.
- 또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곳곳 업체에 선입금하고 차후에 주관기업이 필요한 양산품을 수급 받아 금액을 차감하는 등 이중장부를 운영함.

조치결과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조하여 지원과제에 대한 사업비 사용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점검('18. 10.) 실시
- 특별점검 결과 사업비 용도외 사용 등 부정사항이 의심되어 경찰 수사의뢰
- 수사결과에 따라 부정 사실이 명백히 확인 될 경우 제재조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유용금액 환수 및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임.



02

고하도해상 부실공사

신고내용

- 해상에 기둥을 세워서 기초를 만든 후 그 위에 데크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나, 공사도면(시방서)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채 기초부터 부실공사가 되고 있으니 이대로 방치한다면 나중에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또한 완공되기 전에 강관파이프에 녹이 슬고 강관파일에 설치 시공되어야 할 볼트 작업도 없이 용접으로 시공함에 따라 시공 도중에 부식이 발생함.

조치결과

- 행정안전부의 조사결과 공사 중인 강관 파이프에 녹이 슬고 강관파일 기울어짐 등 문제점이 확인되어, 향후 안전을 위해 보완이 필요함을 사업추진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인의 지적을 인정하고 공사 일시중지(2018. 4. 16.) 및 별도 전문기관을 통한 구조적 안전진단 실시
- 해상파일과 철구조물 조립 부분에서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결함이 드러나 재시공 추진, 구조적 문제점 보완 공사를 거쳐 2019. 9월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개통·운영 중임.



03 인도 부실공사에 의한 공사비 낭비

신고내용

- 준공된 지 4개월여밖에 안 된 교량 입구의 인도 일부가 수차례 유실돼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 사흘간 ㅇㅇ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ㅇㅇ동에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장을 연결하는 ㅇㅇ대교 진입부분 인도 아래 토사가 무너지면서 가로 1~2m×세로 5m 규모의 인도블록 포장이 2~3m가량 내려앉았음.
- 인근 주민들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유실 사고라며 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대책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조치결과

- 관련 법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량의 아스팔트 유제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ㅇㅇ대교의 92개 배수구에 비점오염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였음.
- 그러나, 5월 중순 지역에 15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비점오염방지 시설에 설치된 유제흡착망에 다량의 아스팔트 유제가 고착되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우수가 범람하여 토사 유실 등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 배수관련 설계 또는 시공상 문제라기보다는 집중호우를 대비한 비점오염방지 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대형 하수관 2개를 매설하고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한 횡배수관을 설치하는 등 향후 집중 호우에 철저히 대비하겠음.



04

주거급여 미자격자 부정수급

신고내용

- 신고자는 고시원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고시원 원장이 고시원에 실지 거주하지 않는 자의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조사기관 방문 조사 시, 거주한다고 답변해 달라는 허위진술 동조 요청에 처음엔 응한 바 있음.
- 그러나, 곧 국민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데 사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부정수급 의심자와 고시원 원장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부정수급 사항을 신고함.

조치결과

- ㅇㅇ구청 복지조사팀은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방문확인 조사를 실시(2018. 6. 25.)해 해당 거주지(고시원)에 수급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 수급액 환수 및 2018. 7월부터 주거급여 지급 중단 조치
- 신고인의 신고로 인해 주거급여(연 2,556천원/인) 부당 지출을 막을 수 있었으며, 각 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 관리의 필요성과 경각심을 갖게 하였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위 신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더욱 면밀한 주택 거주 여부 조사를 실시토록 함.



05 남부순환로 실개천 예산낭비

신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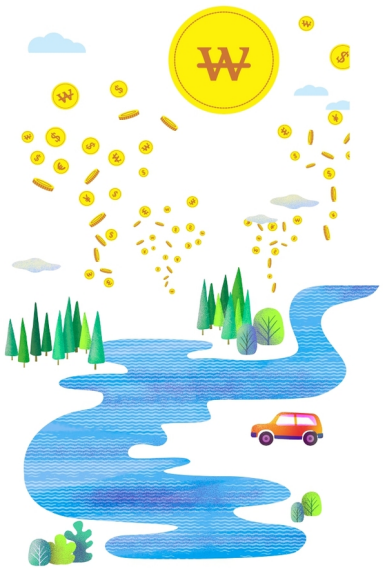
• 서울시 ㅇㅇ대로변 남부순환로에 조성된 실개천이 봄에는 잘 유지가 되어 왔으나, 동절기에는 항상 오물로 가득 차 있음.

• 현재는 화단으로 변경 조성되어 있고, 개천 하부는 이미 물도 흐르지 않고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어 전형적인 예산 낭비

조치결과

• 위 실개천은 2010년도에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주변 지하수를 이용하여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해 왔으며, 이중 실개천의 하단부(종점)에 있는 수경시설은 2015년도에 화단으로 조성하였음.

• 신고인의 신고내용을 확인코자 현지조사를 한 결과 실개천 주변의 오물 등 쓰레기는 없었으나, 실개천을 운영하지 않는 시기(동절기 등)에 관리가 미흡할 경우 쓰레기 등으로 주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에서는 당초 실개천을 조성한 사업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도록 서울 ㅇㅇ구 치수과에 청소, 정비 등 주변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함.

06

도로 재포장공사로 예산낭비

신고내용

- 며칠 전 도로 포장공사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 구간에 또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부분적으로 아스콘 포장과 라인 마킹을 새로 한 구간에 다시 도로(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

조치결과

- 1차 공사에서 과속방지턱 도색 및 주변 아스콘 파쇄 부분에 대한 보강 공사를 하였고, 이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정비 민원제기에 따라 주변 노후 도로를 정비한 것으로 확인됨.
- 향후 과속방지턱 도색작업 및 아스팔트 포장 시에는 주변의 도로 상태 등도 조사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개선하겠음.
- 지자체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재정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07

장애인 재활병원 의료장비 미사용 방치

신고내용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ㅇㅇ병원) 의료장비 및 운영비 지원 예산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부실로 국가예산 낭비

조치결과

• ㅇㅇ병원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장비기능보강, 운영비 등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신고인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지자체(ㅇㅇ시)에서 '18. 5월 현장점검을 한 결과, 지하 1층에 비치된 CT, 엑스레이 촬영 장비 등이 관리자 없이 방치된 것을 확인함.

• 보건복지부에서는 동 병원에 대해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과 조속한 시정으로 정상화 하도록 함.



08

보훈 위탁병원 진료비

신고내용

- 신고인은 91세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거주지에 보훈병원이 없어 위탁병원을 모시고 다니는데, 불필요한 진료나 치료를 많이 권한다는 느낌을 받음.
- 한 예로 최근 아버지께서 넘어져 엄지발가락을 다쳐서 갔는데 엑스레이 및 CT까지 촬영한 후 깁스를 하고, 여기에 골다공증 검사까지 하라고 해 3개월분 골당공증 약을 처방받음.
- 국가유공자가 우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주기 바람.

조치결과

- 전국에 312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보훈복지의료공단내 위탁병원관리단을 구성, 설치하여 위탁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적정진료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에 '진료비 및 약제사용 적정성 항목'을 높은 배점으로 평가하고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8조 제4호는 진료비 거짓 청구로 인해 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위탁진료계약을 해지하고 있음.
- 국가보훈처에서는 신고인의 고견을 참고해 위탁병원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09

정부사업비 예산남용 신고

신고내용

- 산림청 산하기관인 ㅇㅇ지원센터에서 업무와 무관한 식대를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음.
- 또한 직원 채용시 채용공고를 게시하지 않거나 인맥 채용을 일삼고 있어 해당 부분을 바로잡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조치결과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출장신청, 결과보고서, 지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바, 증빙 서류가 불명확한 사례가 있어 센터로부터 소명 받아 재확인했으며, 조사결과를 센터에 통보해 향후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할 것과 지출시 확인 절차 및 증빙자료 첨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직원채용에 대해 조사한바, 센터 본부에서 채용하는 직원의 경우 센터 자체 인사지침 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 다만, 매년 숲길관리청과 계약하는 숲길위탁관리 시 직영으로 사업하는 현장 인력은 현장 전문성을 감안해 유경험 인력의 근로승계 형식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산림청에서는 향후 현장 인력도 투명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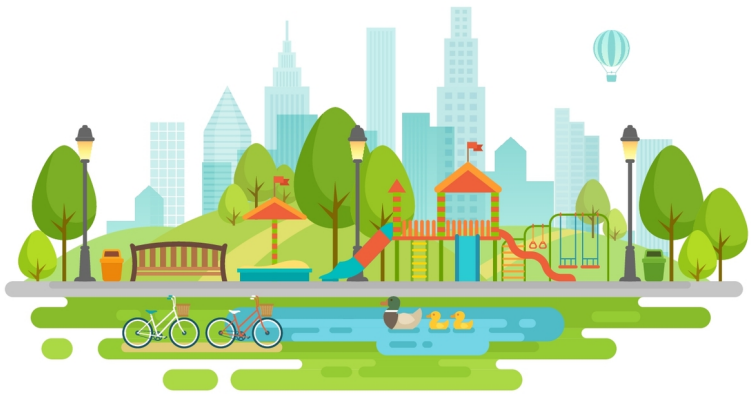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투자심사 관련

신고내용

- ㅇㅇ군 지방정원 투자심사와 관련해 투자금액을 축소하는 등 도(道)심사에서 군 자체심사로 전환되었음.
- 추가 사업비 발생 우려 및 방문객 19만명 산정과 정원운영 수익 산정 의문 등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다고 사료되므로 동 사업 전면적 재검토 필요

조치결과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사업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사료되어 감사 실시
- 행정안전부에서는 향후 부실 운영 및 투자대비 수익창출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위해 ㅇㅇ군에 사전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 및 보완책을 마련토록 함.
- ㅇㅇ군은 민간자본 투자 유치방안을 검토해 '19. 5월 민간투자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정상 추진 중임.



11 인도구간 정비공사 후 재공사 발생

신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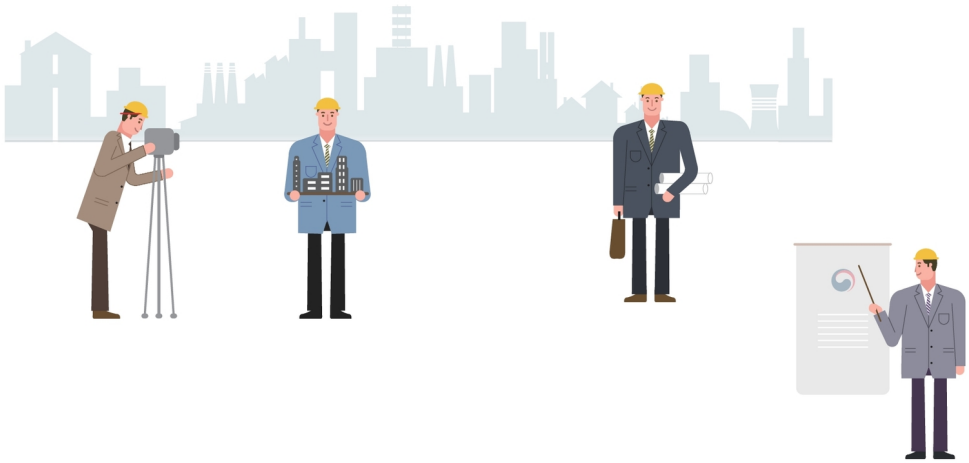
• 기 도로확장공사 구간(ㅇㅇ연립~ㅇㅇ아파트)에서 발행한 2건의 교통사고로 동 구간 인도 등 시설 재공사, 화단 전량 폐기 및 가로등 파손 등의 사항은 예산낭비임.

조치결과

• 인도구간 재공사는 당초사업 계획에 없었으나,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주민 및 관할 경찰서의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ㅇㅇ연립 앞 인도 정비 필요 의견이 있어 기존 공사했던 부분을 다시 공사한 것으로 일부 예산낭비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도 재공사 시 당초 공사에 신설된 보도블럭 및 경계석을 전량 재활용하였고, 가로등 파손은 사고원인자가 보험처리 등으로 전액 복구비용을 부담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12 경로당 마구잡이 신축 등 예산낭비

신고내용

• ㅇㅇ시 경로당 신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경로당 신축 관련 산청서 상의 기본적인 사항 확인 소홀', '에어컨 등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일괄지원으로 인한 비효율 및 예산낭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 문제점', '경로당 운영예산 부당 보조 및 집행' 문제 발생

조치결과

• 경로당 신축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 이용정원 20명 이상 설치신고서 접수시 추진, 통동경로당의 경우 회원명부 및 회의록 확인 결과 20명 이상의 이용자 참여를 확인했음.

• 냉난방기 설치와 관련 ㅇㅇ시는 각 경로당을 방문 경로당 규모에 맡는 냉난방기 용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설비함.

• 운영비는 '대한노인회 ㅇㅇ시지회'가 제출한 경로당별 이용자 명부를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냉난방비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사전 지급하고 있음.

• 경로당 운영예산은 경로당 명부(대한노인회 태백시 지회 자료)를 기준으로 행복 e음 시스템의 주민등록 주소, 사망여부 등을 확인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지자체에서 실제 이용자를 확인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명부를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회원관리 방식 개선, 실점검 확대 등을 통해 불법 지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음.



13

○○시 예산낭비 사례 신고

신고내용

• ○○시가 가축분뇨처리를 위탁한 민간업체에 전기료 등 기본비용을 인상해 주지 않는 갑질 행정을 벌이다 패소해 70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한 것과 관련, 대응 매뉴얼 제정 및 예산낭비 관련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무원 징계 방안 마련

조치결과

• 공공처리시설 위탁 업체에서 가축분뇨처리장을 가동하기 위해 전기료와 슬러지 처리 비용 등 증가에 대한 단가 인상요구에 시는 당초 계약에 인상분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없어 거절한 것으로 패소해 69억원의 손해배상을 한 바 있음.

• 이후 업체의 설비 미가동에 대해서는 7억 8천 6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재가동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하는 등 철저한 시설 운영 감독을 통해 새만금 수질보전에 노력하고 있음.

•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법 및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며 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정하기는 어려움.

• 다만,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노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소송과 관련한 공무원 징계는 지자체 감사 등을 통해 결정될 사안임.



14 국고 손실에 관하여

신고내용

-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특허 전문업체와 공사 계약 시 특허권자에 과도한 비용 지급으로 인해 국고 손실 발생
- 전문시공업체협회 기술관리자와 협의 등을 통해 특허권자의 기술원가 관리 철저 및 특허권자도 경쟁입찰을 통해 합리적인 원가가 지급되도록 관리해야 함.

조치결과

-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계약을 하고 있음.
- 다만, 내진공사, 특정전문공사 특허 등의 특수한 건설공법은 신고인의 의견과 같이 과도한 비용 지급으로 인한 국고 손실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각 기관 주의토록 함.



15 자원봉사 활동비 부정지급에 대한 실태조사

신고내용

•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비 부정수급·지급 및 봉사활동 시간 부정 부여의 문제점을 확인해 예산낭비 요인 제거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

조치결과

•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자원봉사자 무보수 원칙으로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자원봉사자에 대해 실비(식비, 교통비)등을 주는 경우에는 개별로 서명을 받고 각 개인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에 각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규정에 의해 지급 하고 있음.

• 봉사활동 시간의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각 개인 서명을 받고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신고인께서 지적하신 제도적 문제점이 현장에서 충분히 발생할 있다고 판단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16

가평 자라섬 페스티벌 보조금 유용 신고

신고내용

• 평창 문화올림픽 전 총괄 기획 감독이 가평 자라섬 페스티벌을 추진하면서 축제 보조금을 유용(축제 보조금 4억 3,000여만원 중 1억여 원을 유용)한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고, 행안부 정기 감사 시 지자체 축제 보조금 지급과 집행실태 정밀 감사

조치결과

• 본 사례는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낭비원인 유형 중 보조금 관리소홀, 도덕적 해이 및 부정에 관한 유형으로 향후 전국 지자체 전파 및 국민감시단 워크숍, 기타 교육 시에도 공유하겠음.

• 또한 축제 보조금 지급 실태는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권익위, 감사원 등에서 정기,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17 공무원 서울 통근버스 예산낭비

신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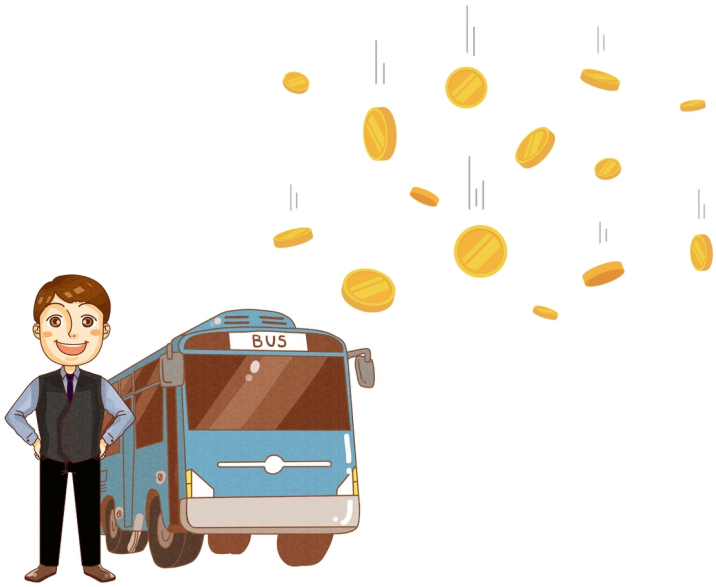
• 사기업체 및 중소업체, 관공서 근무 직원들과 달리 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지속 운영은 공정하지 못한 예산낭비임.

조치결과

• 세종청사 통근버스는 공무원 및 청사 상주근무자 출·퇴근을 위해 정부부처 이전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 주거이전계획, 교육·의료 생활환경, 대중교통 개선 등 세종시 정주여건과 부처 추가 이전 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세종청사 통근버스를 효율적으로 운행토록 하겠음.

• 통근버스 노선 감차 및 폐지(2019. 7. 1.)로 2억원/연 절감

⇒ 수도권 노선 통합(7대 감차), 세종권 노선 조정(8대 감차) 및 2개 노선 폐지(5대 감차)



18 예산 40억 수의계약 친인척 개입 의혹 논란 등

신고내용

• 리조트 단지 공사계약 시 수의 계약 적정 여부 및 지자체장 직권남용 여부, 민간자본 투자 없이 공적자금만 투입하여 혈세 낭비 여부 등 조사 필요

조치결과

• 공사금액이 2억원을 초과 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신안군 자료 검토 결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기 지자체장의 직권남용 개입으로 보기 어려움.

• 리조트 단지 조성은 당초 민간업체의 투자를 받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자 리조트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우선 공사해 예산이 편성 된 국비와 지방비를 집행함.

• 다만, 당초 민간자본을 투자 받아서 진행해야 할 사업을 공적예산만 투입하여 일부 기반시설만 완공하였고, 민간투자는 지연되어 향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ㅇㅇ군에 당초 계획대로 민간투자가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노력 강구 당부






예산낭비신고
사례집
2018년
2019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부 록

- 예산낭비신고제도
-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예산낭비신고제도

세금은 줄이고 국가 경제를 살립니다



예산낭비 왜 생길까?

- 공무원의 사전 수요조사 소홀 등 예산 절약의식 부족
- 불필요한 사업 추진(유사 중복투자)
- 국민의 관심과 참여 부족

예산낭비 최소화

-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고 활성화
- 정부·지자체·공기업의 예산낭비사례에 대해 제도개선 노력 강화



예산낭비, 결국 국민의 부담

- 국민세금 부담 증가
- 재정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어려워짐
- 국가에 대한 불신 증가




예산절감, 건전한 나라살림
• 비효율적 재정지출 개선
• 정확한 수요예측 및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감시와 신고,
예산낭비는 NO!
• 재정정보 공개 확대
• 예산낭비 감시와 참여 활성화
• 예산절감 제안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예산, 아는 만큼 지킨다

예산낭비신고로 소중한 세금 절약하기

예산낭비 신고제도는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시정 요구(국가재정법 제10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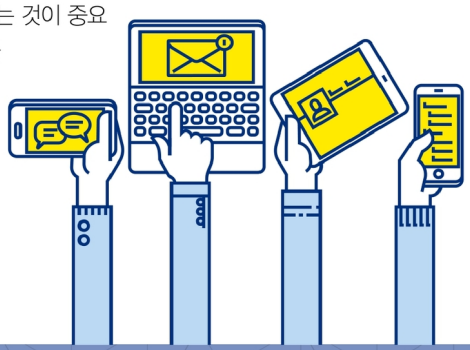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를 통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신고 필요

투명한 예산 운영, 국민 관심과 참여가 열쇠

예산낭비신고는 나라살림을 바로잡는 첫걸음이자 국민의 권리

– 국가 예산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
– 예산낭비신고제도의 유용성을 알고 적극 활용



예산낭비신고 정보

예산낭비신고,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견 수렴
-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제안



예산낭비신고센터, 전국 총 318개 설치

- 총 318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국민신문고에 연계
  (40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7개 교육청, 18개 공기업 등)
- 예산낭비방지 또는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전문성 강화
- 예산낭비신고포털시스템 구축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운영)

※'12년 예산낭비신고 모바일 App개발(안드로이드, 아이폰)

신고 방법 및 신고 처리

국민과 함께하는 신고 방법

Q 예산낭비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
- 스마트폰,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으로 신고
- 전화(1577-1242) 또는 서신 신고



신속한 신고 처리와 인센티브

Q 예산낭비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관계 기관 의견청취, 현장조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 여부 판단
- 신고인에게 30일 이내 조치결과 통보(1회 30일 연장 가능)
- 지적된 예산낭비 사례는 사업시행기관에 주의 및 시정 촉구



Q 예산낭비 신고를 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던데 맞나요?

- 접수된 예산 낭비사례가 타당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20만원~600만원)을 7등급으로 심사해 지급
- 재정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 성과금 (최고 7천 8백만원) 지급 가능(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부 록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18. 9. 13.] [기획재정부훈령 제392호, 2018. 9. 1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정집행관리과), 044-215-53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및 제51조 제5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국가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에 의한 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내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제1호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및 접수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①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신, 방문,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수인 또는 단체가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 ① 신고센터에서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제6조(처리기관 미지정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 문서, 이메일, 유무선 등을 통하여 들어온 예산낭비신고 등이 처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기관에서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7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동의 절차) ① 신고센터는 신청받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른 기관에 관한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털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의 신고센터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타 기관으로 재분류한 경우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심사) 제7조 제1항에 따라 포털시스템상의 재분류를 세 번 이상 거친 예산낭비신고 등은 기획재정부 신고센터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한다.

제3장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제9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은 처리담당자의 의견요청, 실지조사 동행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예산성과금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신고건을 해당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상정토록 하여야 한다.

④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5호 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⑤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 ①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자료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 자료보완요구서에 따라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가 두 번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제5항에 따라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기한) ① 신고센터는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요구 처리가 곤란한 경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때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낭비신고 등의 병합처리) 신고센터는 진행 중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이 동일한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통지)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되면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 이메일, 유무선을 통하여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처리하기 전에 취하한 경우
2.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경우
3. 동일한 신고를 이미 처리한 경우

제15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된 후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주체의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의 신고센터장 또는 예산낭비신고 담당자는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7일 전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신고센터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낭비신고 등 증거자료 미반환) 신고센터에 제출된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한 증거자료는 신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본 확인을 위해 제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제18조(기획재정부 신고센터의 구성원) ① 기획재정부 신고센터의 구성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 신고센터장은 예산낭비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 신고센터에는 현장조사 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타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 신고센터에는 신고센터장 외에 소속공무원 중 1명 이상을 접수관리자로 둘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 신고센터에는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기획재정부 신고센터 구성원에 대한 보수) ① 제18조 제3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다만, 파견된 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소속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위원에게는 적정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간전문위원 또는 현장조사 요원이 예산낭비신고 등과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여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 표창 및 포상금 지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낭비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제21조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표창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되어 포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각 호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1. 신고 등급이 1등급인 경우 600만원
2. 신고 등급이 2등급인 경우 500만원
3. 신고 등급이 3등급인 경우 300만원
4. 신고 등급이 4등급인 경우 200만원
5. 신고 등급이 5등급인 경우 100만원
6. 신고 등급이 6등급인 경우 50만원
7. 신고 등급이 7등급인 경우 20만원

③ 포상금은 매 반기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1조(기획재정부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부위원장은 재정관리국장이 된다.
2. 위원은「예산성과금 규정」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 등 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성과금 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④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심사하여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 방지에 관한 업무수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된 사례와 동일한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2. 사실관계나 예산낭비절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신고내용이 현재 관련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조치한 경우
4. 감사원,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예산낭비사례와 동일한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5. 기타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하는 경우

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제5장 각 중앙관서 예산낭비신고 센터 운영

제23조(각 중앙관서의 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각 중앙관서의 장(기획재정부장관 제외)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할 때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센터장은 5급 또는 6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20조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 낭비신고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운영 중인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포털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노력 등

제26조(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① 기획재정부는 제3조 제1호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낭비 신고정보 분석) ① 기획재정부는 매 반기마다 예산낭비 신고정보를 분석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분석하는 경우 포털시스템 운영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분석결과를 제공받은 기관은 조치결과를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노력) ① 기획재정부는 예산낭비 방지 또는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정책반영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는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실태조사 또는 현장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일부를 포털시스템 운영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할 경우 점검 등 결과보고서 작성 후 최초 개최되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는 점검결과 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점검결과 등을 통보받은 기관은 조치결과를 6개월 이내에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재검토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7호, 2012. 2.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예산낭비대응사례금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사례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지침 시행일 현재까지 사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도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포털시스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조항중 포털시스템에 관한 조항은 포털시스템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 2013. 12. 10.〉

이 지침은 2014.1.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 2014. 4. 1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호, 2017. 8.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 2018. 9.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명 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전화		이동전화	
	전자메일				
신청기관명					
신청구분	☑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답변방법	☑ 서신 ☑ 전자메일 ☑ SMS				
신고 등 내용					

20 . .

신청자 ㊞

※ 유의하실 사항

① 신고 등 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 장일 경우에는 신청자와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자가 단체 · 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신청기관명'란은 신청자가 신청한 예산낭비신고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2호 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다수인용)

신 청 인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대 표 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전자메일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비고	1. 4인 이상 공동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을 제출할 경우 별지 연명부 제출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단체용)

단 체	단 체 명			
	주 소			
	연 락 처		FAX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전자메일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

접수번호		제 목		
신 고 자	성 명 (명 칭)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접 수 자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기 관 명

[별지 제5호 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

접수번호	구분	신고자			담당자	관련기관			검토의견	검토결과*	재원				절감액	유형
		성명(명칭)	연락처	답변방법		기관명	담당자	기관의견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낭비신고 절감제안			서신,전자메일, SMS												

* '구분'이 낭비신고이면 'Ⅰ:타당한신고', 'Ⅱ:타당하지않은신고', 'Ⅲ:무관한신고'로 기입
* '구분'이 절감제안이면 '채택', '일부채택', '불채택'으로 기입

[별지 제6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예산낭비신고 등 보완 요청

1. 귀하께서 우리 ○○부(처, 청, 기금)에 제출하신 (신청번호 예산낭비신고 등 제목)의 내용 중 붙임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청하오니 20 . .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회 이상 보완요청에 대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를 종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보완할 사항 1부. 끝.

기 관 명 인

담당	서명	○○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 - 일련번호(접수일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

<table>
<tr><td rowspan="2">접수번호</td><td rowspan="2"></td><td rowspan="2">신고자</td><td>구 분</td><td>☑ 개인 ☑ 공동 ☑ 단체</td></tr>
<tr><td>성 명</td><td></td></tr>
<tr><td>구 분</td><td colspan="4">☑ 낭비신고, ☑ 절감제안</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예산절감
수입증대
사 항</td><td>규 모</td><td colspan="3">백만원</td></tr>
<tr><td>상세내역</td><td colspan="3"></td></tr>
<tr><td>제도개선
추진사항</td><td colspan="4"></td></tr>
<tr><td>비 고</td><td colspan="4"></td></tr>
</table>

2018

예산낭비신고 사례집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기획재정부